

# **부산항 항만하역 근로자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20. 7. 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항 항만하역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항만하역작업 안전관리 기준(하역작업 공통, 컨테이너화물 하역, 일반화물 하역) 및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을 말한다.
2.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한다. 단, 선박수리업은 항만구역에 출입하는 선박수리업을 말한다.
3. “사업주”란 항만구역에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5.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에 따른 무역항에서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6. “안전관리규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에 따른 에이프런 등 항만구역 안의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만운송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과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및 항만구역 내에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위반자 제재조치)**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는 사고예방을 위한 항만하역사업주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항만하역사업주는 항만구역 내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부산항 항만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시행지침”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세부시행지침을 위반한 자 및 이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책임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장 항만하역작업 안전관리 기준

### 제1절 하역작업 공통

**제5조(보호구)** ① 항만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항만 줄잡이 근로자는 보호구 이외에 별도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금지 구역)**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통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선석 및 안벽 등에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컨테이너 장치장 또는 화물 야적장 또는 창고 등에 관계자 이외의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무인자동화크레인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안전울타리(볼라드와 체인을 연결한 것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조도)** 항만하역 작업장의 조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90조에 따라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8조(훈증 작업)** 항만구역 내에 「수출입식품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소독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3자의 출입)** ① 항만구역 내에 하역 근로자 이외의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검수·감정·검량 등에 종사하는 제3자가 출입할 경우, 출입하는 자는 항만하역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항만하역사업주는 선박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제3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점검)** 항만하역사업주와 선박소유자는 각 선박에 대한 하역작업 시작 전 선박 내 통행설비, 에이프런, 하역장비 등 작업 장소 및 설비가 안전한지 상호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인원확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선박에 대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시작과 종료 시 소속 근로자의 인원수 및 건강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선내작업)** 사업주,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선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장 안전하고 잘 보이는 곳에서 작업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통신 및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화물창 외부의 선박 측면에서 화물창 내부를 보며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작업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선박소유자는 이동통로에 안전난간 및 연결로프 등을 설치하고 선내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운전)** 사업주는 크레인, 야드트랙터, 스트래들 캐리어, 리치스태커, 엠프티핸들러 등 항만구역 내 운송장비 운전자에게 휴대전화를 포함한 작업과 관련이 없는 영상정보 전달기기를 작업 중에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조(화물 붕괴 방지)** 사업주는 화물창 내부 또는 갑판 상의 화물이 이동 또는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

을 때에는 화물을 고박하는 등 화물 이동 또는 전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절 컨테이너화물 하역**

**제15조(에이프런 안전조치)** 사업주는 에이프런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위험상황 시 대피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컨테이너 하역작업)** 사업주는 컨테이너 하역작업 시 근로자들이 낙하, 추락 및 충돌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컨테이너 고박작업)** 사업주는 육상 또는 선박 내 고박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하역장비 안전관리)** 사업주 하역장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 및 하역장비 운전자는 야드트랙터, 스트래들캐리어 등 하역장비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운송장비 주행로와 에이프런 근로자의 안전구역을 차선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운송장비가 안전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스트래들캐리어 운전)** 사업주는 운전자가 컨테이너 상하차 위치에 접근하기 전 일시 정지 및 스프레더 위치를 컨테이너와 충

돌하지 않는 높이까지 권상하고 정지 위치를 지시하는 자의 신호에 따라 접근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스트래들캐리어의 운전 지점에서 별도의 근로자 배치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절 일반화물 하역**

**제20조(하역설비 점검)** ① 사업주는 각 선박에 대한 하역작업마다 사전에 선박책임자와 함께 선박 및 육상하역시설의 이상 유무를 상호확인하고 별도의 이상이 없을 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하역장비 및 각종 설비는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비정상작동 하더라도 안전한 경우 사용되어야 한다.

**제21조(양화장치 운전)** 사업주는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데릭 또는 크레인 등의 양화장치에 화물을 적재, 이동할 경우 운전자가 제한 하중, 제한 각도 및 제한 선회반경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갑판 상태의 점검)** 사업주는 화물창 내부에 적재된 화물의 운반, 이적, 혼적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치 빔 또는 개방된 갑판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만약 해치빔 등이 확실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혼재·근접작업의 조정)** ① 사업주는 선내 하역작업 영역에 근접해서 선박수리, 선박급유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선내 하역작업에 대한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박소유자 등과 협의하고 작업의 순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사업주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하역작업을 다른 사업주와 같은 선박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근접한 다른 선박 또는 근접한 장소에서 하역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의 사유로 작업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작업을 조정하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화물 위 장비운전)**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적재된 화물 위에서 운전할 경우 화물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자동화물 선적)** 사업주는 RO-RO 선박에 차량계 화물을 선적할 경우 근로자와 충돌을 예방하고, 부두 노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매물 등의 방지)** 사업주는 입자상 물질, 가루, 광석류 등의 산적화물을 하역할 때에는 매물 및 낙탄 등의 위험요인을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매물 및 낙탄에 맞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절 안전매뉴얼**

**제27조(안전매뉴얼)** ① 부산항만공사는 이 지침에 따라 항만하역작업 안전관리 기준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부산항 안전기준 매뉴얼(이하, “안전매뉴얼”이라한다.)을 제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부산항만공사의 안전매뉴얼을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이행 평가)**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주의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여 임대료를 연동하여 산정하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제3장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 운영

#### 제1절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제29조(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 구성)**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부산항의 사고예방을 위해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이하, “상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3.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4. 부산항만공사
5. 부산항운노동조합
6. 항만운송사업주 또는 단체
7. 항만운송관련사업주 또는 단체
8. 선박회사(선박소유자 포함), 선박회사대리점 또는 단체
9. 항만관련 교육·연구기관
10.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 또는 단체

**제30조(상설협의체 운영)** ① 상설협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마다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상설협의체는 반기마다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회의가 개최되는 분기는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항만 안전정책 내용 전파
2. 항만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 정보 공유
3.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
4. 사업주별 안전대책 우수사례 공유
5. 기타 항만안전관리에 관한 협의 및 협조사항

## 제2절 상설협의체 실태조사

**제31조(실태조사)** ① 상설협의체는 사고예방을 위해 반기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제3조에 따른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설협의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설협의체는 실태조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실태조사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해당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실태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태조사단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단은 상설협의체 소속기관·단체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32조(실태조사 결과)** ① 상설협의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고,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개선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상설협의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선 및 시정조치에 시일이 필요한 사업주의 경우, 개선 예정 완료일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설협의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 결과 또는 개선조치 결과는 상설협의체에서 협의 및 공유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